

학원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전략

관련법 개정 예정... 경쟁력 확보 길 열릴 듯

제과제빵 등 기술전문학원 시장의 전면 개방과 맞물려 제과학원계는 관련법의 대대적인 정비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현재 여건 상으로는 외국 학원이 진출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술교육의 활성화로 국내 학원은 물론 외국 학원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 편집자주

글/ 김규호
(서울제과기술학원장)



현재 선진 각국은 직업교육의 개혁을 중심으로 국가의 교육, 훈련 체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들 직업교육 개혁은 기존 교육체제로서는 새로운 직업 창출이 어렵고, 실업률이 연간 12 ~ 13%에 달함에 따라 야기된 국가적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도 신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95년 일부 분야의 기술전문학원 시장개방에 이어 올해부터 제과제빵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전문학원이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관련법의 개정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개방은 됐지만 외국학원 진출 움직임 미미

지난해 개방된 일반학원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95년 일부 개방된 기술전문학원 분야의 투자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 따라 국내 기술전문학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강생수가 경제적인 규모에 크게 미달해 외국학원이 국내 진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설비비,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 제반 경비의 상승도 국내 진출을 꺼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개방된 제과제빵 학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프랑스의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신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내 학원의 활성화와 함께 외국 학원의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직업교육 개혁은 '5.31 교육개혁'이 제시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직업교육을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교육, 평생에 걸친 교육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 외국 학원 중 국내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프랑스 코르동블루 한 곳뿐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청구그룹과 코르동블루가 기술제휴 협정을 체결하는 모습.

이를 위해 자격증 제도를 개편해 학습과 취업을 원활히 연계하고 직업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원의 자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개혁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직업교육 개혁 법안에 기대 높아

현재 제과제빵 등 기술전문학원을 둘러싼 문제점으로는 ▲사회 전반의 3D 기피 현상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기술교육에 대한 사회의

및 학력을 인정하고 대학 등 상급교육기관에 편입학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학원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

외국학원 진출 대응은 시기상조?

한편 국내 제과제빵 학원계는 새로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개정 작업 중이어서 구체적인

새로운 법안들은 국내 학원에게뿐만 아니라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학원에게도 긍정적인 여건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학원들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기전이라도 갖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식 부족 ▲정부의 지원, 육성책 부재 ▲수강료 규제로 인한 투자 노력 미미 등이다. 이와 함께 ▲외국계 학원 설립 허용 ▲직업훈련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등 유사 교육기관의 증가 ▲학원간의 과당 경쟁 등 시장 상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전문학원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직업교육 개혁 작업에 업계의 요구조건을 반영시키기 위해 세미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형성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제과제빵 등 기술전문학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새로운 법적 장치 마련, 정부지원, 명칭 변경, 정규 교육과의 연계, 학원 난립 규제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전문학원은 일반학원과 교육의 성격이 다르므로 현재의 학원법에서 탈피, '지식인력개발사업법' 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이의 규정을 받아야 한다. ▲기술전문학원이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접 교육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술전문학원의 사회적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곳은 명칭을 학원에서 '학교' 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기술전문학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점

로 중장기 계획을 잡고, 특히 외국 학원 진출에 따른 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다.

직업교육 개혁은 곧 국내 기술전문학원의 활성화를 꾀하고 외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 법과 시행령이 마련된 후 갖가지 환경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 학원도 현재의 국내 여건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내법이 정비될 때까지 당분간 국내 진출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학원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준비 중인 법안들이 결국 직업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전문학원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갖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들은 국내 학원에게뿐만 아니라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학원에게도 긍정적인 여건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전문학원에게 올 한해는 과도기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손을 놓고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내일을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고정적이고 획일화돼 있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으로써 학원간의 컨소시엄 구성 등은 현재 검토할 만한 내용들이다. 또한 기존 강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사진의 자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교육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도기를 맞아 국내 학원이 수요자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